

“의사 집단휴진, 합리적 선 넘은 행동”

정부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 ‘강하게 경고’

응급실·중환자실 근무자부터 우선 법적절차 밟을 방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서 단체행동 지속하기로 결정

정부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전임의 등에게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전임의는 환자의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부터 우선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뤄진 파업 지속 여부 관련 재투표에서 134명이 파업 강행을, 39명이 중단을 선택했다. 13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은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

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집단휴진이 정의롭지 못하고 법에 위반되는 4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 반박하고 나섰다.

손 반장은 첫 번째로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라며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거부는 강행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키우게 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며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람이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는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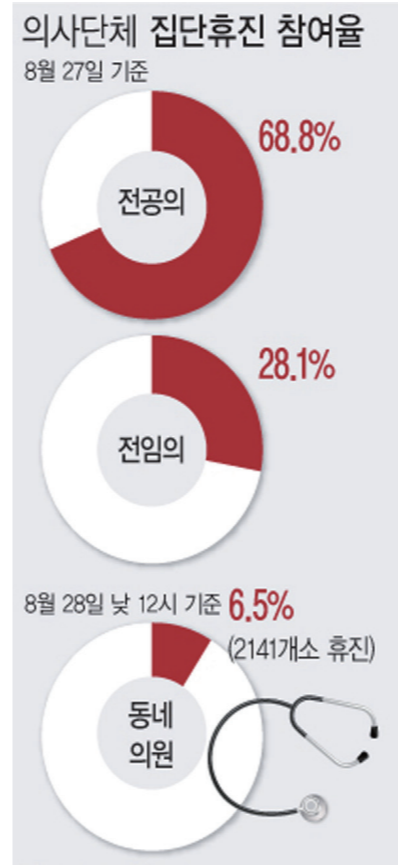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고용과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는 근무자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생계·의사면허 등 신분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면서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느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등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 대상으로 우선 추가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부산과 경기 의정부에서는 집단휴진 영향으로 음독과 심장마비 응급환자 2명이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해마다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의사라는 면허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이다.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서도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려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섰다.

서선욱기자

여자친구 만나려 자가격리 위반 20대 벌금형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2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1일부터 4월3일까지 광주 자신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날 오후 7시까지 자가격리 지인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코로나19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 주거지를 이탈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가격리 기간 마지막 날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시가스 배관 잘라 아내 협박 50대 2심서 감형

평소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집안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다음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하면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2시4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0)씨에게 욕설한 뒤 주방에 있던 가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돼 있던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도시가스를 밖으로 새어 나오게 한 다음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B씨를 마구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도심서 오토바이·승합차 충돌...1명 숨져

28일 오전 5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26)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마주 보고 달리던 B(58)씨의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16명

17살에 ‘취직 시켜준다’일본인에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97) 할머니가 지난 29일 별세했다.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6명으로 줄어든다.

3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부산에 사시는 이 할머니가 전날 밤 11시께 주무시듯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지난 1923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7살인 1940년께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준다”며 동행을 강요한 일본인 두명을 따라가게 됐다. 당시 부산에서 출발한 이

할머니는 일본을 거쳐 대만基隆에 도착, 잇나나록쿠 칸부대라는 군부대에서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

어느날 위안소 관리인이 “전쟁이 끝났다”며 사라지자 이 할머니는 혼자 항구로 가서 군인 병원선을 타고 부산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05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뒤 씬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생활하며 수요시위 참가와 해외 증언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빈소 등 기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